

제2분과 토론회 ‘한국의 저널리즘, 기본원칙은 무엇인가?’

알면서도 안 지키는
‘시민을 위한 진실 보도’

이수현 / 한국언론진흥재단 저널리즘지원팀 사원



‘저널리즘 고취를 위한 연속 토론회’의 두 번째로 열린 ‘한국의 저널리즘, 기본원칙은 무엇인가?’ 토론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개최한 ‘저널리즘 고취를 위한 연속 토론회’, 그 두 번째 시간의 주제는 ‘한국의 저널리즘, 기본원칙은 무엇인가?’였다. 10월 11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를 위해 발제자와 사회자 그리고 여덟 명의 토론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기자, 학자,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몸소 체험한 경험을 바탕으로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에 대한 견해를 나눴다. 익숙하지만 까다로운 주제였다. 그래서 더 뜻깊은 자리였다.

변하지 않는 무게중심

기조발제는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이 맡았다. 그는 박영상 저널리즘위원회 위원장이 1995년 저술한 글, ‘다시 돌아가야 할 저널리즘 원칙과 규범’ 내용 중 “뉴스는 언론기관에 의한 사회현상에 대한 설명이고 의미부여 과정이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장치이므로 뉴스에는 지켜야 할 규범이 있다”는 부분을 소개하면서 저널리즘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위원은 빌 코바치(Bill Kovach)와 톰 로젠스틸(Tom

Rosenstiel)의 저서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에 소개된 열 가지 저널리즘의 기본원칙도 소개했다. **별첨 1 참조** 현대 디지털 시대에 뉴스의 생산, 유통, 소비 방식이 크게 변화했지만 그럼에도 저널리즘 원칙은 언론의 기본으로서 지켜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른바 가짜뉴스(fake news), 허위정보(disinformation)의 범람과 이에 대한 각국의 대응책도 소개했다. 특히 박 연구위원은 대응책으로서 팩트체크의 중요성과 해외 모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또한 언론의 극단적 환경 변화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감시견(watchdog) 역할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살 것인지, 감시견으로 살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서 언론사와 기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언론의 미래가 달려 있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의 발제를 필두로 토론자마다 다양한 진단과 처방이 이어졌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는 “저널리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주권 행사를 돕는 일”이라며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것은 식견 있는 시민이고, 식견 있는 시민을 가능케 하는 것이 저널리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베트남전 개입 명분이 됐던 통킹만 사건 등을 사례로 들면서 주류 언론이라고 해서 저널리즘의 기본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널리즘의 기본원칙》과 더불어 《Blur: How to Know What’s True in the Age of Information Overload》란 책도 기자들이 읽어볼 만한 도서로 추천했다.

시민 토론자로 참여한 이은지 한국외대 졸업생은 “언론이 무엇을 보도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실어나를 것인가에 방점을 찍고 있다”며 미투 보도의 사례를 들었다. 그는 “언론은 단순한 팩트의 전달자가 아니라 팩트를 모아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며 젊은이들이 언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짐작케 했다. 김정기 한양대 교수는 공공성의 경시 풍조가

만연해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김 교수는 “디지털 시대가 정보의 생산과 유통은 물론 소비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와 저널리즘의 수행 방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기자들이 공적 이슈보다는 개인적이고 편향적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환경을 헤쳐 나가는 방안으로 “재미있으면서도 쉬운 스토리텔링 기법을 도입해 독자와 소통하고 심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숨 막히는 조직 문화

조직 문화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사람치고 진실 추구나 공정성, 독립성 등의 원칙에 대해 들어보지 않은 이는 없을 것이다. 마치 매일 호흡하는 숨처럼 누군가 알려주지 않아도 이미 오래전부터 알아온 듯 익숙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그 원칙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 앞에 한국 언론은 작아지곤 한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할까? 토론자들은 원인으로 언론사 조직 문화를 꼽았다. 기자 개개인이 각자 숨을 쉬는 방법을 터득해 알고 있다 한들, 호흡할 공기가 남아 있지 않은 비좁은 뉴스룸에서 제대로 숨을 쉬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이희정 한국일보 미디어전략실장은 관성에 젖은 조직 문화와 조직 구성을 비판했다. 훌륭한 인재들이 들어와도 관행을 좇고 문제 제기를 막는 조직 문화를 체험하면서 좌절감을 느끼는 현실을 아쉬워했다. 이 실장은 “뉴스룸 조직이 지금보다 사회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며 뉴스룸 조직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주문했다.

정은령 서울대 팩트체크센터장은 한 정치부 기자의 사례를 들며, 속기사만을 양성해내고 있는 뉴스룸 조직 문화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어려운 입사시험을 통과해 기자가 돼도 질문을



워싱턴포스트(사진)도 최근 600명이던 기자 수를 750명으로 늘렸다. 이재경 이화여대 교수는 “우리 언론사들도 과감한 경영 개선을 통해 편집국 내 취재기자 규모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

던지고 생각하는 훈련을 시키지 않고 그저 속기사 역할만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언론사 조직으로서는 품이 많이 들고 번거로운 일이라든가 기자들이 스스로 묻고 생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정환 미디어오늘 대표는 “언론사가 좋은 저널리즘을 구현할 수 있는 경영적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광고를 팔며 살아남았던 시대는 저물어가고 있고, 뉴스 소비 방식은 스트리밍 트렌드로 변하고 있다. 후원 모델이나 구독 모델이 대안으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과연 돈을 지불한 사람에게만 특정 뉴스를 제공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이나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저널리즘 기본원칙을 지키는 언론사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존재하는가를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언론사 스스로 생존을 위해 타협하고 있는 것들을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 참여도 중요해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사회의 인권감수성이 높아질수록 언론이 이슈를 다루는 방식도 섬세해져야 한다. 뉴스를 보는 시민의 눈이 성숙해지고

있는 만큼 뉴스 생산 조직도 이에 걸맞은 기사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렇게 생산된 기사는 다시 시민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 그런 점에서 저널리즘과 그 기본원칙은 언론 조직이나 언론인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시민 모두가 관여해야 하는 문제다. 빌 코바치와 톰 로젠스틸은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에서 “오늘날 시민으로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을 이해하고, 소유하며,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김종필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은 저널리즘 기본원칙이 주목받는 이유로 가짜뉴스의 범람과 연관 지었다. 그러면서 김 부회장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권력 방식의 대응책으로는 가짜뉴스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그는 “미디어 독해력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선제적 대응책”이라며 “뉴스 콘텐츠에 담긴 정보가 사실에 부합하고 진실을 추구하며 자신의 가치와 결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해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자들은 우리나라 뉴스 이용자들의 눈높이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이희정 한국일보 미디어전략실장은 관성에 젖은 조직 문화와 조직 구성을 비판했다. 훌륭한 인재들이 들어와도 관행을 좇고 문제 제기를 막는 조직 문화를 체험하면서 좌절감을 느끼는 현실을 아쉬워했다.”

했다. 정은령 센터장은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의 원인을 풍등과 외국인 노동자에 포커스를 맞추는 기사에 대해 시민들이 수궁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페이스북을 비롯해 SNS에 반박글이 물밀듯 올라온 사례를 보면, 시민들은 이미 의미와 맥락, 분석이 부재한 기사를 가려내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정환 대표 역시 “‘인사이트’라는 유사 뉴스 사이트가 571만 명의 페이스북 팬을 거느리는 시대이지만, 독자들은 여전히 진짜 뉴스를 갈망하고 있고 권력에 맞서는 정의로운 기자에 열광한다”고 말했다.

이재경 이화여대 교수는 “높아진 시민사회 수준을 반영하려는 언론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인들이 도구적 언론관을 탈피할 것을 주문했다. 정치권에 진출하는 기자들의 사례를 들며 “나를 키워줄 세력을 위한 뉴스가 아닌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페셔널한 기사가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교수는 “뉴욕타임스가 1,400명, 요미우리가 3,000명이 넘는 기사를 보유하고 있고, 워싱턴포스트도 최근 600명이던 기자 수를 750명으로 늘렸다”고 소개하면서 “우리 언론사들도 과감한 경영 개선을 통해 편집국 내 취재기자 규모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마존의 베조스가 워싱턴포스트를 인수한 이후 편집국에 간섭하지 않는다”며 편집국의 자율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이 언론을 자극해 품질 높은 언론을 이끄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주장했다.

2001년 초에 발행된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의 저자들은 세 차례에 걸쳐 개정판을 냈다. 2014년 3판을 내면서 책의 내용 중 30~40% 정도를 보완해 고쳤다고 한다. 민주주의가 끊임없는 유지보수를 필요로 하듯, 저널리즘의 원칙도 끊임없이 다듬고 고쳐나가야 한다. 우리 사회의 시대적 요청에 귀 기울이고, 시민과 함께 숨 쉬는 저널리즘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기본 중의 기본일 것이다. 📖

별첨 1

저널리즘의 기본원칙 10

1. 저널리즘의 첫 번째 의무는 진실에 대한 것이다.
2. 저널리즘의 최우선 충성 대상은 시민들이다.
3. 저널리즘의 본질은 사실 확인의 규율이다.
4. 기자들은 그들이 취재하는 대상으로부터 반드시 독립을 유지해야 한다.
5. 기자들은 반드시 권력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자로 봉사해야 한다.
6. 저널리즘은 반드시 공공의 비판과 타협을 위한 포럼을 제공해야 한다.
7. 저널리즘은 반드시 최선을 다해 시민들이 중요한 사안들을 흥미롭게 그들의 삶과 관련 있는 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전달해야 한다.
8. 저널리즘은 뉴스를 포괄적이면서도, 비중에 맞게 다뤄야 한다.
9. 기자들은 그들의 개인적 양심을 실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10. 그들의 선택을 통해 뉴스 생산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뉴스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그들이 스스로 생산자와 편집자가 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 빌 코바치·톰 로젠스틸 저, 이재경 역.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중에서